



## 고령화와 은퇴인구 확대 우려

최 원 선임연구원

- AP통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(Baby boom) 세대의 고령화로 전 세계적인 은퇴인구 급증을 우려하였으며, 노동가능인구(working-age population)보다 고령인구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연금 혜택의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함.
  -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5년에서 1965년 사이 출생률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높아졌으며, 최근에는 이 시기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되어 향후 은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.
  - 반면, OECD 조사에 따르면 고령화로 30개국의 은퇴 이후 남성 평균수명은 많은 국가들의 연금시스템 개혁이 이루어졌던 1958년 13년에서 2010년 19년으로 약 6년 정도 늘어났음.
  - 현재 연금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령의 인구 구성비가 중요하나 고령화로 노동가능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.
    - 중국은 노동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10년 11%에서 2050년 42%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, 미국도 같은 기간 20%에서 35%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.
  - 향후 은퇴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은퇴 이후의 생존 기간도 늘어나고 있어 은퇴 이후의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.
-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가시화될 경우 정부, 기업, 개인들은 각각 은퇴 이후의 소득을 보전하는데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.
  - 첫째, 정부는 고령화, 출생률 하락, 그리고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둔화 등으로 이전과 동일한 연금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국가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우며, 따라서 은퇴 이후 연금 급부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.
  - 둘째, 기업은 과거 전통적 퇴직연금 시스템에서 제공하였던 은퇴 이후의 확정된 급부에 대한 보장(guaranteed)을 현 상황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움.

- 셋째, 은퇴 소득 보전을 위하여 저축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경우 금융위기로 더 큰 경제적 위기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으며,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.
- 또한, 은퇴인구 확대에 의한 여러 재정적인 문제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었음.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문제가 대두되었고 가용 자원이 금융위기 해소를 위하여 집중됨에 따라 연금시스템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 금액이 축소되고 연금수익률 제고 압력이 커짐.
  - 결국, 헝가리, 폴란드,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금시스템 규모를 축소하거나 세제지원을 줄이는 방안이 시행되었으며, 이후 다른 여러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.
  - 또한,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 전체적인 은퇴 비용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욱 늘어났음.
  - 한편,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 받는 자산운용 수익률 달성에도 불확실성이 커짐.
-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과도기적 단계의 연금시스템이 가지는 세대 간의 갈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시됨.
- 중국은 고령화로 지급하여야 할 연금 총액은 증가하고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노동가능인구의 부담은 늘어나 연금시스템 개선이 불가피하나, 연금 수령 시기에 도달한 사람들의 경우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갈등의 소지가 있음.
  -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관련한 적정 수준의 소득 대체율과 수급개시연령을 결정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, 특히 재정불안 해소를 위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책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.
  - 향후 고령화와 관련한 확대되는 복지수요를 국가의 복지시스템에서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공·사보험의 역할제고가 필요함.

(AP통신, 파이낸셜뉴스 등)